



태고종 총무원장이 비상대책위의 23일 총무원사 점거로 촉발됐다. 태고종 집행부의 26일 경찰청 항의시위(사진 왼쪽)와 비대위측의 28일 기자회견 모습

## 결국 터진 태고종 사태 ‘점입가경’

### 집행부 “불법난입”vs 비대위 “도산스님 퇴거”

태고종 총무원장 퇴진을 두고 집행부와 비대위 양측이 급기야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충돌은 2월 예정된 집행부와 비대위 간의 소송 판결을 앞두고 비대위 측이 총무원 청사를 점거한 데서 비롯됐다. 비대위 측 스님 10여명은 1월 23일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태고종 총무원사를 점거했다.

집행부와 비대위 등 양측은 점거 사태 다음날인 24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를 격렬히 비난했다. 태고종 집행부는 창신동 원각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태고종 총무원사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비대위 측이 망치 등 흉기를 들고 불법 폭력점거를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도 총무원 청사 인근 갯거리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종단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생각이 없고 반대세력에 대한 보복을 전명함에 따라 총무원에서 퇴거시킨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이 양측 충돌을 막기 위해 태고종 총무원사를 차단한 가운데 26일 집행부와 비대위 양측은 경찰이 상대방을 비호하고 있다며 경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태고종 비상대책위(위원장 종연)는 28일 태고종 총무원 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지역경찰관에게 고액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 측은 경찰 측에 뇌물을 제공한 내용과 이번 사태에서 청사 경비를 위해 총무원 명의로 1억여 원을 차용한 내용 등을 담은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 노덕현 기자

## 10.27법난위원장 지현 스님 선출

### 27일 회의서... 의료비 지금 등 논의

국무총리실 산하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5차 회의에서 새 위원장에 지현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 사진)을 선출했다. 10.27법난위원회 출범 이후 다섯번째 위원장이다. 지현 스님은 “기념관 건립 등 중요한 사업들을 원만히 진행하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27법난위원회는 이날 피해자 해당 여부에 대해 심의를 벌여 6명을 추가로 인정했으며, 2명에 대해서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명예회복 신청 166건과 의료지원 신청 68건 등 모두 166건을 접수해 136건과 43건을 각각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문 스님(조계종 사회부장), 삼보스님(법홍사 주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지현 스님은 법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1년 수계했다. 12~16대 중앙종회의원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청량사 주지와 총무원 총무부장,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 총도감 등을 맡고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 사찰 양극화 시대, ‘공영제’ 도입 필요하다

##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이 같은 사찰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서를 최근 발간했다. 사찰 양극화 현상에 대한 단일 주제의 전문 연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충남 중소도시에서 있는 A사는 전형적인 지역 사찰이다. 신도 수는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으며, 숫자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대중 살림을 꾸려나가기 어려워 소임 스님을 두지 못하고 있고, 같은 이유로 공양주도 없다.

#강원도 탄광 지역의 B사는 석탄 산업이 사양화 되면서 신도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과거 초하루법회에는 200~300명의 신도가 동참했지만, 이제는 20명 남짓 사찰을 찾는다. 그렇다보니 B사에서 소임을 맡고자 하는 문종 스님이 없는 상황이다.

농어촌 중심으로 사찰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찰들의 경제가 함께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사찰간의 부익부 빈익부 심화로 인한 양극화와 재정 규모가 있는 사찰을 둘러싼 사유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이 같은 사찰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서를 최근 발간했다. 사찰 양극화 현상에 대한 단일 주제의 전문 연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농어촌 말사 재정 악화 심각  
독살이, 사유화 악순환 가져와  
불교적 재정확보 방안 마련해야  
교구 차원 공영제 시행 필요

연구서는 지역의 교구본사와 말사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실태조사와 해당 주지스님들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님들의 진지한 고민과 함께 종단 차원에서 해결해 가야 할 대안의 단초를 정리했다. 연구서에 따르면 말사들은 △신도 감소와 노령화 △기도와 재수입 급감 △변하지 않는 고정비용 △독살이의 만연 등의 고질

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한 이들 문제는 서로 연결돼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도가 감소하니 자연히 사찰 재정이 악화되고 재정 규모가 취약해지는 사찰은 독살이를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연구서는 “부족한 재정은 적자 운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대중살림을 불가능하게 한다”면서 “독살이의 증가는 재정의 불투명한 운영, 삼보정재와 사찰의 사유화로 인한 승가공동체 파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서는 교구를 중심으로 한 ‘사찰 공영제’를 제안했다. 교구 중심 사찰 공영제는 교구 수말사를 교구의 특별분담금 사찰로 지정해 공영화 하고 재원을 모아 기본적 생계도 어려운 말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앙종회에서 입법을 통한 공영제 추진은 일선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교구 중심 사찰공영제가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게 연구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연구서는 “말사들이 처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용살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

단의 역할”이라며 “사찰 공영제가 구현돼야 사유화나 독살의 폐단이 사라질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과 활동이 우선되는 승가공동체의 복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 독살이 금지를 비롯해 △승려노후 복지의 완비 △사찰 전기요금 해결 △사찰 수익사업 모델 마련 △분담금 형평성 마련 등을 종단 차원의 대책으로 내놴다.

불교사회연구소가 발간 스님은 “일선 사찰이 직면한 재정 위기는 양극화 뿐만 아니라 사유화, 독살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단시간에 해결책을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찰 재정 확충방안과 건전성 강화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가운데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교사회연구소는 ‘사찰예결산제도 정착과 재정투명성 실현을 위한 연구’ 사업과 ‘교구 활성화 방안 연구’ 등 21세기를 맞는 사찰과 교구의 원활한 운영과 이를 위해 종단이 추진해야 할 법적,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정책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국민 행복 위한 긍정에너지 심어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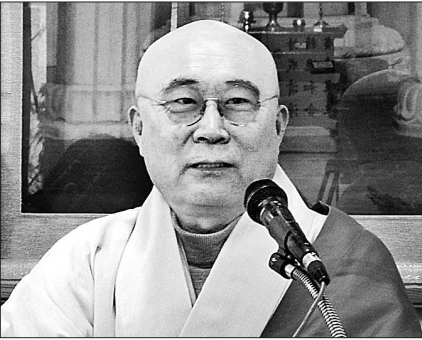
### 조계종 포교원 신년계획

#### ‘교구 중심 포교기반 구축’

조계종 포교원이 ‘교구 중심의 포교기반 구축’을 기치로 포교에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현 스님(사진)은 1월 2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교구의 균형발전 실현사업을 위해 지역 정책 수립과 청소년·대학생 포교활성화 및 전법 프로그램 보급 강화 등 신년 사업계획을 밝혔다.

지현 스님은 “각종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과 스트레스는 국민 개개인 삶의 질과 행복감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런 때 불교가 갖고 있는 생명존중과 행복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고 사회적 긍정에너지를 창출하는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원은 34대 총무원 주요 정책 기조인 ‘중앙·교구의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교구 중심의 지역포교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포교사단·불교대학 등 포교·신도관련 사업 중 10여개 사업을 교구에 이관하거나 협력 업무를 조정한다. 또한 신도시 1개, 전법지역 1~2개 지역을 선정해 지표 조사와 더불어 찾아가는 종책연찬회 등 공동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청소년 및 대학생 포교활성화를 위해 기반을 구축한다. 포교원과 교구본사, 대학생전법단, 대불련 동문회 등 대학생 포교 관련기관과 협력회의를 운영하고, 교구별로 대학불교학생회 후원 사찰을 2~3개 확대해 나간다.

지현 스님은 “대학생 불교학생회는 전국에 145개 대학에 존재하고 있지만 저조한 활동과 감소추세에 있다”며 “올해는 청소년 및 대학생 불자 육성을 위한 사업방안을 관련기관과 함께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원은 또한 수요자 중심의 전법 프로그램 연구와 보급을 강화해나간다. 법회와 설법 콘텐츠를 매일 조계종 스님들에게 제공하며,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대상을 고려해 설법대회를 개최한다. 이밖에 어르신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지원, 명상지

도자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지현 스님은 “사찰이 농촌에 위치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의 노인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 포교 콘텐츠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가족 포교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포교원은 포교단체 역량 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제, 여성, 상담, 어린이·청소년 분야 등의 전법단 스님과 후원단을 확대해 나간다. 이주민 100만 명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포교원은 국제전법단 및 국제포교사회와 다문화가족 포교에 대한 대책수립도 마련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신도조직 확대와 활동역량을 배가하기 위해 14개 신도단체 지원관리 업무 이관을 통해 중앙신도회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사찰·교구표준회칙을 제정 및 보급해 나간다. 또 품계제도를 시행한지 4년째에 접어든 포교원은 신도교육을 내실화 하고 품계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사찰 및 불교대학이 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할 계획이다.

지현 스님은 “올 한해는 포교원 별일 20년의 포교성과와 취약점을 깊게 성찰해 향후 미래불교를 준비하는 한해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 보광 스님 논문 2편

#### 표절·중복 게재 결정

#### 보광 스님, 윤리위에 반박

동국대 총장 후보 보광 스님의 논문 2편이 표절로 판명됐다. 이에 대해 보광 스님은 “연구윤리위가 편향적으로 공표해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박정국, 이하 연구윤리위)는 1월 26일 2차 회의를 열고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30편의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그동안 표절에 대해 지적을 받은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는 이재수 박사의 ‘유비쿼터스 시대의 불교문화콘텐츠 연구’를 표절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 ‘불전 전산화의 미래 방향은 ‘인터넷 포교~’ 논문의 내용을 중복게재한 것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광 스님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연구윤리위의 판단에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다.

보광 스님은 1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예비조사 시점에 본조사를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재심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재단에 징계를 요청한 점, 비밀엄수 규정에도 이를 언론에 공개한 점 등으로 연구윤리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사) 한국불교미륵종 임시총회 소집공고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하여 법인 정관 제 19조 2항에 의거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전 종도스님들은 중무 다망하시더라도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불기 2559(2015)년 2월 13일(금요일) 11시
- 장 소 : 미륵종 총본산 관음정사
- 참석대상 : 전 종도스님

### 2. 안건

- 중앙종의회구성을 위한 종회의원 선출의 건
- 차기 총무원장 선출 방법의 건
- 총무원장 선거 일정의 건
-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의 건
- 종단 제반 현안의 건

2015년 1월 29일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대행 영빈